특별기고

군민 곁에서 희망 만드는 의회 다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2023년 새해 달력의 첫 장을 마주했다.

계묘년인 올해는, 지혜를 의미하는 검은 색과 안정을 상징하는 토끼가 만난 해다. 코로나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우선 바란다.

군민 여러분들과 전남매일 애독자 여러분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고,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한, 선물같이 멋진 한 해가 펼쳐지길 기원한다.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힘차게 출범한 제9대 강진군의회가 벌써 6개월이 지나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그동안 의회는 초선의원의 패기와 재선의원의 관록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도전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해 왔다.

읍면 복지회관과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올 본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2.25%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역대 최다인 195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과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 각 분야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해 강진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했다.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두섭 의원 대표발의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남 최초이자, 전국 최대규모의 육아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을 시행중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확대 지원을 건의해 시행을 앞두고도 있다.

군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강진~마량 구간 도로 4차선 공사', '쌀값 안정을 위한 의무적인 시장 격리제 도입', '강진만 패류 감소에 따른 보상금 신속 지급'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들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해 촉구하는 한편,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과 면담하며,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주기를 부탁했다.

또한, 세 분의 도의원(차영수, 김주웅, 전서현)과 전체 군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오직 순수하게 강진군 발전만을 생각하며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들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취지에서 공부 모임 '도군도군! 신강진'을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초선인 유경숙, 노두섭, 윤영남 의원을 주축으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와 예결산 분석 및 심의 연구회를 구성해 의원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힘썼다.

아울러,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알 권리 실현을 위해 SNS 홍보시스템을 구축했고, 본회의나 상임위 등 유튜브 생중계, 일문일답 군정질문 방식 채택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뜻 깊은 해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책임있는 의회 만들 것

새로운 의지와 다짐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한 제9대 강진군의회는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군민과의 소통은 민의를 반영한 대의정치의 첫걸음이므로, 소통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

지난해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듯이, 앞으로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군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 정치효능감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도 늘 변함없이 군민 가까이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강진군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설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환영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청년이 정착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 삶 안전망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등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총사업비 2,053억원을 투입해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교육, 복지·문화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 맞춰 전남도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사업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30여개의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7기에는 76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해 1,9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농어업 100년을 이끌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을 본격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2031년까지 10년 간 4조5,000억원을 들여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사업 계획 수립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청년이 없는 지역은 인구 및 지역소멸이 멀지 않았고 활기가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면서도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문화시설을 대폭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화적으로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과밀하고 경쟁이 치열해도 그곳에 입성하면 다양한 문화 혜택을 입는다는 점 때문에 탈광주, 탈전남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레저, 쇼핑시설 등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하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제대로 지켜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정책이다. 사업주들은 '시설 내 고시 의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등록 신청서와 매장 게시물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종업원 등 개인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6개월 간 계도 기간 까지 뒀다.

그러나 일부 체육시설은 방문 상담 후에야 강습료와 환불 규정을 알려준다고 하는가 하면,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질수록 업체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가격 표시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 관내 체육시설들은 새해를 맞아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할인가 외에 구체적인 요금체계나 환불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시설 내부와 홈페이지에도 가격표가 기재된 시설은 손에 꼽았고, 전화를 해야 안내하거나 방문 상담을 유도하는 곳도 비일비재하다.

대학생 장 모씨(21)는 "대부분의 헬스장이 홈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표시하는게 불법인 줄 알았다"며 "한 곳은 방문 상담을 하고 나서야 가격을 안내하더니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며 가격표 사진도 못찍게 했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91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86.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6건), 품질 불만(2건), 기타(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체력 관리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기고

여순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이미경
여수시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을 시도한 지 20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돼 지난해 1월 21일부로 시행됐다.

20년 만에 시행된 현행 특별법은 제정 당시 여러 사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화해, 상생,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원을 이루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10월 6일, 정부는 여순사건 발발 74년 만에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 구성된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희생자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순사건법은 생존한 희생자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순 때문에 단 한 분도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여순사건법은 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 기간 또한 매우 짧아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여순사건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이 생존 시에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돼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 주장과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7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여순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 인원 확충과 진상규명 조사 및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이같은 우리의 주장과 내용들을 시의회 촉구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전남도지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냄으로써 굳은 의지를 밝힌다.

'고용 보장' 대체교사 농성의 아쉬움

기자수첩

김혜린
사회부 기자

"실직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돼야 합니까."

'고용 연장'을 두고 광주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대체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계약직 85명 중 60명이 '대량 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시청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체교사 85명 중 60명은 지난 2021년 기간제로 채용돼 오는 2~3월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고용 기간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일방적 해고 통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요구는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의 고용 보장이다. 광주시는 타지역 사례와 기간제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오는 2월 계약이 종료되는 42명은 당시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 경쟁으로 채용된 이들이다. 2년여 전 이들은 광주시에 수탁기관 변경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한 달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광주시는 수탁기관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했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제한 경쟁' 방식을 통해 고용 승계를 보장했다.

한시적이긴 하나 이미 한 차례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요구를 수용한다면 다른 보육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분명히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정책 등 근본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이거 하나 못해주면서',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왜 안되냐'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번 농성이 근본적인 고용 환경 개선이 아닌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아쉬움이 떨쳐지지 않는 이유다.

독자광장

주정차 시 문단속 확인해야

누구나 가끔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로 차량 시정장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기다 해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차량털이 범죄는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열린 차량만을 노려 차 안의 귀중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10대들도 손쉽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사이드 미러를 접을 것이며, 차량 안에 현금,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